

“대의원 잡아라” 민주 당권주자 총력 구애

전체 투표 45% 차지...현장 대의원 표심 향배 주목 후보 진영, 지지 호소·전대 참석 요청...조직력 총동원

‘전세버스 부대가 당권 향배를 가른다.’ 민주당 당권 향배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장에 전세버스를 타고 집결하는 대의원들의 표심이 결정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판세가 어느 한 후보의 압도적 우세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체 투표에서 45% 비율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실시되며 전국의 대의원들은 지역구 별로 전세버스를 대어, 전당대회장으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원의 지역위원장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당권 주자를 거

명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과 원의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개편 회의를 통해 자신과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인사들을 대의원으로 실질적으로 추천·임명한다.

그만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각 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물 밑에서 지지를 표명했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지역구 대의원들의 전대 참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 아직 유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과 원의 지역위원장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대의원들을 전당대회장으로 실어

날 수 있는 각 후보 진영의 조직력이 막판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의원은 1만5700여명이며 이번 전대에는 1만1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300대 정도의 전세버스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잠실 체조경기장 인근에 집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대의원 투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의원들의 전당대회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전대가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이 태풍을 뚫고 투표에 참여할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사·도 의원 등도 태풍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도 태풍의 강도와

시기, 경로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의 현장 연설도 막판 부동층 대의원들의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전당대회 당일 현장 연설을 설득력 있게 하면서 경쟁자였던 박지원의 원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승리,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 연설에서 대의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격동적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전대 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 후보의 조직력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와 태풍의 강도, 현장 연설 등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빈손 특검” vs “권력에 무릎”

드루킹 특검 연장 포기 여야 반응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특검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대 특검 중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더욱이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거짓말로 입을 맞추고, 특검 또한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즉 알고 있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특검 연장 요청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

치 특검’, ‘빈 손 특검’이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흡입 내려는데 혈안이 됐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에 대해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소득주도·혁신성장 같이 가야” 김-장 갈등설 봉합

〈동연〉 〈하성〉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충돌 피하고 동일 메시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최근 갈등설을 일축이라도 하듯 경제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시각차를 보여온 ‘경제 투톱’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논쟁적인 발언을 피하고 ‘일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대기업·중소기업·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했다.

두 사람은 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김 부총리),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장 실장)라며 입을 모았다. 나아가 장 실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날 선 비판을 받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데,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를 불식하는 데 각각 주력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인데 직접 영향받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는 가계소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모습)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자리로 찾아가 팔을 잡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늘려주는 정책, 가계지출을 줄여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소득의 효과를 내는 정책 등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부분도 큰 틀에서 임금근로자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 두 가지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대상 근로

자가 300만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근로자가 230만명으로, 전체 소득을 늘리는 근로자로 봐도 10%”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저는 혁신성장의 개념을 규제개혁보다 크게 본다. 산업, 제도, 혁신인재(혁신성장의 요소로) 보고 있다”며

“규제혁신은 산업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8대 선도 사업, 플랫폼 경제의 지원과 육성, 전통적 제조업을 포함한 주력 사업의 문제, 혁신창업 등이 혁신성장에 포함된다”며 “생태계와 혁신 인프라, 거점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 오늘 내년 예산안 협의

올해보다 40조 증가...일자리 예산 늘릴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한다.

당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 규모의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는 없었으나 고용 대책과 관련한 일자리 예산 등 관심이 쏠린 일부 예산의 증감 폭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올해 예산(428조8천626억원)보다 약 40조원 늘어난 470조원 안팎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가율로 보면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간 예산안 증가율과 관련한 기재부

의 공식 입장은 ‘7.7%+α(알파)’였으나 여당 내부에서는 두 자릿수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19조2천억원)보다 20% 가까이 증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각한 고용위기에 따른 재정확대 요구에 정부 역시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지난 19일 당·정·청 협의에서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기국회 앞 입법전략 논의

31일 워크숍...이낙연 총리 등 각 부처 장관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정기국회를 대비한 워크숍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22일 “이낙연 총리가 직접 워크숍을 찾아 의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 장관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총남 예산의 한 리포트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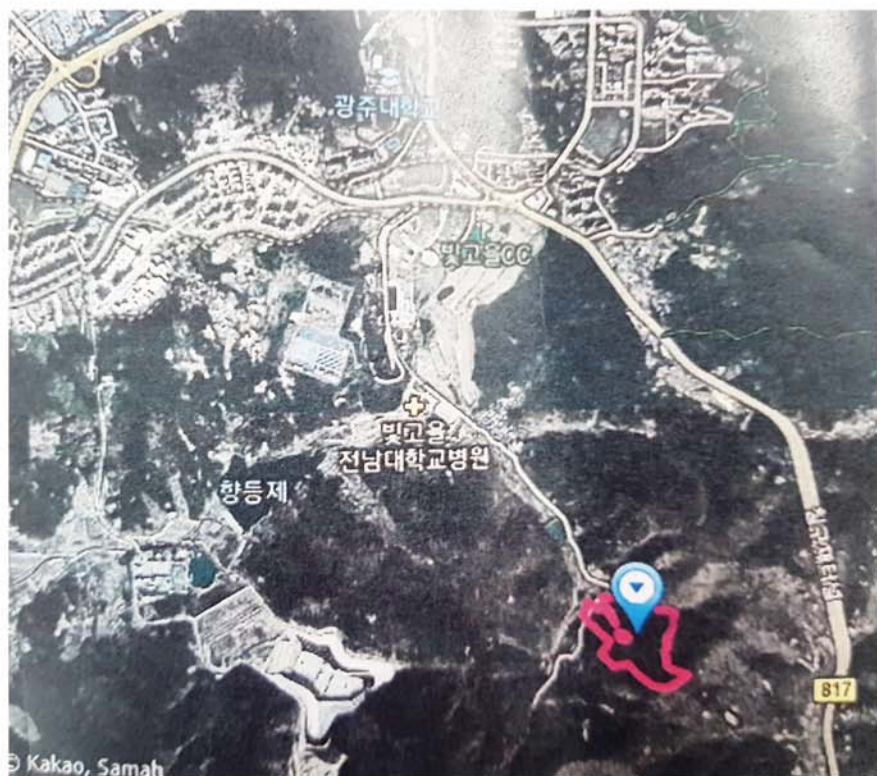
를 공유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 직후 열리는 만큼 새 지도부와 의원들, 나아가 민주당과 정부가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예전 워크숍 때보다 토론 시간을 부쩍 늘리자는 건의가 많다”며 “상임위원 분과토론에는 각 장관도 참여해 당정 간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